

# “김대중 대통령 정신 계승”

## 민주 도당, DJ 서거 16주기 맞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18일 오전 성명을 내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광훈 도당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죽음의 위협과 옥과 망명까지 감내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냈다”며 “IMF 외환위기는 국가적 절망 속에서도 국민과 고통을

나누며 조기 극복을 이끌었고, IT·문화화강국의 토대를 세운 지도자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은 시대의 명령이었고, 지금도 살아 있는 교훈”이라며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빛의 혁명’은 김대중 정신의 계승이자 새로

운 실천”이라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 약자의 눈높이 존중받는 나라, 정의와 평화가 살아 있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정의로운 분권을 실현하고 민생을 지키는 정치로 국민의 희망에 응답하겠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빛의 혁명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

# “농식품바우처, 낙인 부추겨… 제도 개선해야”

## 민주 윤준병 의원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오히려 이용자에게 낙인 효과를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드 뒷면에 ‘농식품바우처’라는 문구가 표기돼 사용 시 취약계층임이 드러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분석하며, “정부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신부, 영유아, 아동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먹거리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0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지원 규모는 2022년 81억6,500만원에서 올해 320억8,700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제한적이고,

가구별 지원금은 1인 4만원에서 4인 10만원으로 고물가 시대 취약계층의 장바구니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금은 줄어든다.

윤 의원은 “농식품바우처 카드는 취약계층이라는 낙인을 부추기고 있다”며 카드 디자인 개선, 지원 대상 확대, 지원금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취약계층 부담 완화와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2025년 을지연습 실시

2025년 을지연습이 18일 실시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최초 상황 보고를 받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화력발전소 부지 방문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길)는 18일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부지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위원들은 용계동의 신장읍 변전소 기초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상주하고 있는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한 공사 방해요 반대대책위를 고발한 건에 대하여 즉각 취할 것을 한전측에 요구했다.

이어, 최근 공사가 재개된 화력발전소 현장방문에 앞서 인근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읍시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결정에 대한 빠른 시행을 요구하는 주민들에 대한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읍=김대환 기자

## 군산시의회 임시회 26일 개최

군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종대)는 18일 회의를 열어 제277회 임시회를 오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11일간으로 개최 일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심의결과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했고, 서동환 의원이 제안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했으며, 두 안건은 오는 26일 1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금융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총 33건의 부의안건을 다룰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25년 금융운용계획 변경안 1건 △조례안 24건(의원발의 20건 포함) △공공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6건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 도의회, 의정지원 역량강화 교육

### 도정 주요 정책·국회 입법 방향 등 7개 부문… 22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회(의장 문승우)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의회사무처 2층 의원총회의실에서 사무처 전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의정지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의정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도의회가 도민들에게 한층 더 수준 높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최근 신규 임용자와 시군 전임자가 증가함에 따라 의회 운영을 위한 의회제도·법령 이해, 지역의 주요 정책 및 현안 파악,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등을 위한 자료수집·조사, 조례 입안 등 의회 사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이번 교육에는 관련분야 전문가 및 지방의회 전문교육기관 출강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을 초빙했다. 강사진들은 △전북도정 주요 정책 및 현안 △지역정책에 대한 국회 입법 방향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 △자료수집·분석 기법 △자치법



규 입안 절차 등 7개 주제, 총 14시간 과정으로 5일간 매일 2~3시간씩 열띤 강의를 펼친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역량 확보가 목표”라며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기회 확대와 함께 현장학습, 학습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 사무처는 문승우 의장이 직원들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제도 관련 가이드북을 제작, 전 직원에게 배포하고 자체 학습활동을 실시했다. 또, 상시적인 실무역량 강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테마파크 조성 2심 패소… 책임있는 행정 이행”

### 남원시의회, 시에 촉구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테마파크) 2심 법원 판결에서 패소하자 이에 대한 남원시의 책임 있는 행정 이행을 촉구했다.

법원은 남원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협약과 관련된 1심에서 약 408억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이어, 지난 14일 2심 판결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남원시가 해당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현재 재정지출도가 열악한 남원시는 민생안정지원금 등 시비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약 408억 원 이상의 손해배

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등 재정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은 “남원 관광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이 이렇게 된 상황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집행부는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정당한 검토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의원총회에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판결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바탕으로 추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민주 박수현 의원, 행안부 특교세 총 43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박수현 국회의원이 발의한 행정을 펼쳐 1인 3억을 하면서 국가와 지역주민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공주·부여·청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주·부여·청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43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확보한 특별교부세 시군별 세부내역은 공주시가 △시도 26호(교통회관~의당농협) 도로확포장 공사 6억 △제민천 산책로 진출입 차단시설 자동화 사업 7억 등 총 13억원이다. 부여군은 △부여읍 쌍부 6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4억 △내산면 구룡 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5억 등 총 15억원이다.

청양군은 △금강변 파크골프장 확충 공사 8억△무한천 최적로 정비사업 7



억 등 총 15억원이다. 이번 재원은 각 지자체의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공주·부여·청양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응급 복구와 함께 중장기 재난 대응 인프라 개선에도 활용되어, 재해 재발 방지와 지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공주·부여·청양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

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146억원(2024년 상반기 53억, 2024 하반기 50억, 2025년 상반기 43억)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꾸준히 힘써왔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유형화해 국정과제를 수립했다.

현재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최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공주·부여·청양 핵심사업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발로 뛰고 있다.

/권희성 기자

# “지속 가능성 보장… 농어촌 주민수당 도입을”

## 오은미 전북자치도의원

### 월 30만·연 360만원 지급 시범사업 기간 단축 등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진보당, 순창)이 18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형 농어촌 주민수당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지난 13일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5~6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연 180만원)의 농어촌 주민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2028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역시 최근 ‘전북도 농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 등 7개군 각 1개 면을 대상으로 매달 1인당 10만원, 연 120만원의 지역화폐를 3년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 의원은 “농어촌 주민수당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진보당이 2022년부터 제안한 소멸 위험지역 거주 수당 정책이 3년 만에 결실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이 18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형 농어촌 주민수당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의원은 △농어촌 주민수당 월 30만원·연 360만원 지급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예산 확보 △시범사업 기간 1년 단축 및 2028년 전북 전역 본사업 추진 △시·군 지자체의 연 360만원 지급 목표 예산 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약 60.5% 수준으로, 연 360만원의 지급은 결코 과도하지 않다”며,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적극

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진보당은 전북도민과 함께 월 30만원, 연 360만원 전북형 농어촌 주민수당 도입 운동본부”를 구성해 2028년 제대로 된 농어촌 주민수당 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연구모임과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농어촌 거주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노력할 바 있다. /이만호 기자

##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전해산 의병장 가치 재조명

### 전북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 주관 학술 세미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임실군)이 지난 15일 오수시장 상인회 2층 회의실에서 ‘전해산 의병장 가치 재조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우리고장독립민체정신계승회, 광복회임실군지회, 대한노인회임실지회 우수사람청년회 등 임실지역 다양한 단체가 함께 참석했으며,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이 지면을

통해 축사를 보내왔다.

박정규 임실문화위원장은 ‘전해산 의병장 발자취 및 활동 영역’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일제강점기 당시 한반도 전역에서 활약한 우리 지역 출신 의병장이 많지만, 지금까지 그들의 업적을 기념하는 일에는 소홀했다”며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 민족의 저항 정신을 보여준 우리 지역 대표적 인물인 전해산 의병장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전해산 의병장의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전해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지역 사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임실 출신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전해산 의병장은 구한말인 1907년 군대해산에 항거하여 의병을 일으켜 호남일대에서 활약했으며, 일본군과의 치열한 교전에서 큰 전과를 거둔 인물이지만 평화가 받고 있어 가치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